

국무총리 지시 제 5호 제 18344호 2 (11)

1975. 3. 25.

수신: 수신처 참조

폐지
(88.7.25)

제목: 외국인사 초청시 사전조정에 관한 지시

외국인사 초청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청인사에 대한 사전조정을 받을 것을 지시하니 시행에 단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원, 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 기업체(이하 정부 기관이라 한다)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초청계획서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제 1항의 초청계획서 제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는 내무부 장관이, 정부관리 기업체는 주무부 장관이 미리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 1항의 조정을 받아야 할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외국 원수,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을 초청하는 경우
- 나. 국제기술 협력규정에 의한 기술훈련생을 초청하는 경우
- 다. 외국 원조 자금에 의한 전문가 또는 기술자를 초청하는 경우
- 라. 정부투자 기관이 건설계약에 의하거나 기술 제공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및 국내산품 외국수입업자를 초청하는 경우

마. 사업단위로 시행되는 기술용역단을 초청하는 경우

4. 정부기관은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청목적, 초청인사의 명단, 초청일시, 주요경력, 현직위, 피초청자에 대한 주요 참고 사항, 초청경비 및 부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초청계획서를 초청장 발송 1개월전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각기관은 기관별로 국제협력을 주관하는 과를 지정하여 초청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초청인사와의 유대를 계속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초청인사의 기록등을 종합 집중 관리한다.
6. 문교부 장관은 광복 30주년 각종 기념행사를 계기로 하여 초청인사에 대한 학위수여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청인사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7. 광복 30주년 행사를 위한 고포학자 및 고포언론인 초청은 외무부 장관이,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재외국민의 초청은 국방부 장관이 각각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한다. 끝.

국 무 총 리